e커머스 규제 도마 위… “공정질서 확립” vs “경쟁력 약화”

〈정부〉 〈이커머스 업계〉

온플법 국정과제 공식화

온플법, 거래 조건 공개 등 담겨
업계 반발… “혁신서비스 발목”
글로벌 스탠다드 부적합 우려도

지난 16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하며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규제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이커머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안을 확정하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규율체계 마련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포함했다.

◆피해는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에

18일 업계는 온플법이 시행되면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규제다. 온플법 시행으로 거래 조건 고지, 정산 주기, 수수료 구재 공개 등이 의무화될 경우 플랫폼 운영 유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커머스 업체 A 관계자는 “지나치게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되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도하거나 중소 판매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는 지난 5일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온플법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참석한 이동일 세종대학교 교수는 “국내 온라인 유통은 이미 물류 내재화, 포털 중개, PB 중심 등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며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고 규제하면 차별성이 가지는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직매입 모델이나 네이버의 중개 모델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명예교수는 “새로운 유통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플랫폼 가치사슬의 본질과 실증을 토대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범위와 정도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만 18개에 달한다.

이커머스 B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나 규제 정도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美 반대 입장 표해… 공정거래법 활용 절충 조언도

미국이 온플법에 반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글, 애플 등 미국 플랫폼이 온플법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온플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식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선 “통상 협상이 중요한 이슈이기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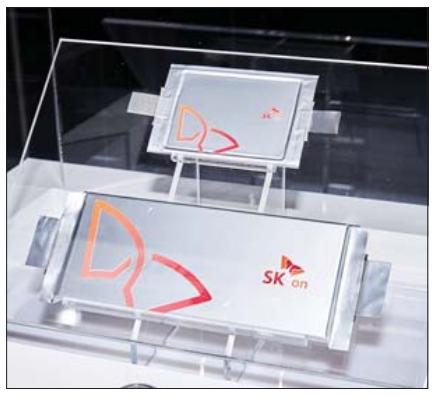
온플법이라는 획일적이고 강력한 수단 대신 공정거래법을 활용한 절충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한 시장을 만드려는 취지는 옳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을 규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플랫폼 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전고체 배터리, 안정성·경제성 불투명… 상용화 지연 전망

덴드라이트 등 기술적 난제 산적
“시기보다 수율·원가 경쟁력 우선”



인터배터리 2025’ 현장에 전시된 SK온의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SK온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오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를 내걸었지만, 실제 성과까지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기보단 수율·원가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의 주요 배터리 구성물 중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채운 차세대 전지다.

기존 액체 전해질은 이온 이동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연성 탓에 화재 위험이 존재했다. 전고체는 불연성 고체 전해질을 써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와 출력도 기존보다 뛰어나다. 현존 전기차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주행거리를 늘려 성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삼성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시제품을 공급하며 성능 검증을 진행 중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 황화물계 전해질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온도 2028~2029년 상용화를 타진하며 뒤를 쫓고 있다.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지난 2022년 2750만달러(약 4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400억달러(약 58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상용화까지 현실의 벽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배터리업계가 꼽는 최대 난제는 덴드라이트(dendrite)다. 리튬 금속 음극을 쓸 경우 충·방전이 반복되면서 나뭇가지 모양의 돌기가 형성돼 수명과 안전성을 동시에 위협한다. 실제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연구팀은 황화물계 전해질을 적용한 전고체 셀에서 덴드라이트가 전해질을 관통해 단락을 일으킨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고체 역시 구조적 보완 없이 덴드라이트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계면 안정성도 큰 걸림돌이다. 고체 전해질과 전극은 액체처럼 빈틈을 자연스럽게 메우지 못해 충·방전 과정에서 접촉 불량이 발생한다. 일본 도요타가 공개한 초기 전고체 시제품 역시 수십 회 충·방전만에 급격한 성능 저하를 겪은 바 있다.

양산 과정의 불확실성도 크다. 고체 전해질은 균일한 제조가 쉽지 않고 전극과 맞닿는 계면 가공과 수율 확보가 모두 비용과 직결된다. 삼성SDI가 공개한 파일럿 라인에서도 ‘압착 공정의 정밀도’가 가장 큰 과제로 꼽혔다. 세라믹 전해질은 제조 단가가 높고, 황화물 전해질은 수분과 반응해 황화수소(H_2S) 가스를 발생시켜 생산라인 안전 부담이 커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고체는 미래지향적 기술이지만 과장된 기대보다는 난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삼성·LG·SK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수율·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러, LNG 공급망 리스크 고조… 美 알래스카 사업 이목집중

사할린 LNG 프로젝트 불확실성 확대
포스코인터, 글렌파른 예비 합의서 체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한 예비 계약을 체결해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 사할린 LNG 프로젝트에서 배당 송금 제한과 장기계약 재협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계약은 국내 LNG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 글렌파른과 연간 100만 톤 규모의 LNG를 20년간 공급받는 예비 합의서를 체결했다. 계약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필요한 철강 공급 조건도 포함됐다. 이 물량은 지난해 한국 전체 연간 LNG 수입량(약 4701만 톤)의 약 2%로, 사할린 LNG 도입량(연간 최대 150만 톤, 전체 수입 대비 약 3%)과 비슷하다.

현재 러시아 사할린 섬에서는 사할린-2 LNG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은 2008~2028년까지 연간 최대 150만 톤을 도입하는 장기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국유화 조치 이후 배당 송금 제한과 계약 재협상 리스크가 불거졌다. 일본 기업들도 배당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매 계약자인 한국 역시 계약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대체 조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스코인터의 알래스카 LNG 예비 계약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8월 미국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와 스위스 기업 셰니에르와 체결한 연 330만 톤 규모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LNG 도입 계약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로운 공급선을 확보함으로써 가격·공급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노스슬로프 지역의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 항까지 약 1300km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해 액화·수출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연간 생산량이 1500만~1800만 톤으로 한국 연간 수입량의 절반에 달한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운송비 절감이 가능하고,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 에너지부(DOE)의 별도 수출 허가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분 참여와 트레이딩 등 다양한 사업 모델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 계약 구조와 수익 모델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국 셰일 LNG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 지분 참여와 장기 계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예비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 형태다. 포스코인터는 이들 조건의 타당성과 수익성이 검증되면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 1면 ‘국장 복귀는 지능순…’서 계속

李 대통령, ETF 공개 4개월만에 26% 수익

또 이 대통령은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관련해서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한반도 정세·안보 문제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대립·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 부분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이 지금까진 부동산 투자·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후 진행된 오찬에서 센터장들은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각 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 사례 등을 짚으며 가능한 제안들은 따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안을 전달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공약 실현 의지를 보이기 위해 투자한 ETF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임기 동안 총 1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당시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코스피200, 코스닥 150 ETF에 각각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으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코스피 200에 400만원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총 4400만원을 투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이익은 1160만 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

/서예진 기자 syj@